

광주 의회, '춤추는 음식점' 놓고 눈치

조례 전면 재검토... '정치적 부담·업주 피해 우려' 고심

'반쪽짜리 조례' 비판도... "개정 이루는 것 직무유기"

광주 서구의회가 27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사고'의 발단이 된 이른바 '춤추는 음식점' 조례를 놓고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개정이나 폐지에 미온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엔 조례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막상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니 관련 업종 업주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17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1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클럽 붕괴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특위는 클럽 인허가와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위는 출범 직후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을 모으는데 그쳤다.

클럽 사고의 발단이 된 '춤추는 조례'에 관해서는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으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의회 안팎에선 특위가 '정치적 부담'과 '업주들의 피해' 등을 이유로 조례 재검토를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춤추는 음식점' 조례는 지난 2016년 제7대 서구의회 의원 5명(이동춘·오광교·오광록·김은아·윤정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됐다.

이 중 이동춘·오광록·김은아 등 3명은 전직이고 오광교·윤정민 의원은 현직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전임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를 재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며 "조례 제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이해관계자와 사업자들의 반발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다.

조례를 폐지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다.

2016년 2월 1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되 시·군·구의 조례로 허용할 경우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조례에 따

라 '춤추는 음식점'이 합법이지만 폐지할 경우 모두 불법이 된다"며 "무턱대고 폐지를 할 경우 사업주들의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여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구의회가 '춤추는 음식점'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미적거리면서 비판

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구 주민 박모씨(44)는 "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구청은 조례에 따라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갖는다"며 "각종 안전점검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어떤 조항도 없이 반쪽짜리 조례를 만들고도 조례 개정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19일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조례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변호사 등에게 자문한 내용 등으로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C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클럽은 서구의회 조례의 혜택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며 클럽으로 변질영업을 해 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뉴스1



파도와 떨어지는 한판 승부 18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파도 속으로 몸을 던지고 있다.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첫발...고3 44만명 혜택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오는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고3 약 44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후 내년 고교 2·3학년 오는 2021년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9학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방향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다.

예초 내년부터 3년 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해 도입 시기 단축을 예고했다. 지난 4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올 2학기부터 시행'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현재 고

3 약 44만명이 2학기부터 혜택을 받는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88만명)이, 2021년에는 전 학년(126만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 학생들은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 사립고나 사립 외국어고 재학생 등이 대표적이다.

첫해 예산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부담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520억원을 확보·편성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필요한 예산 총액이 3856억원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교육급여, 공무원 학비 지원 등 이미 교육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총 소요액(약 2조원 예상)의 47.5%를 각각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이후 재원은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 시행은 당장 내년부터 장담하기 어렵다.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고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고교육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증액교부금 제도를 신설·반영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씩 예산을 분담하기로 한 바 있다.

뉴스1

광주소방, 추석연휴 화재예방대책 추진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캠페인 등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1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와 취약시설 안전관리 등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전통신장, 대형마트,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 99곳이다.

소방시설 차단·장지 행위,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비상구 폐쇄·파란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안전교육을 한다.

소방관서장이 전통신장, 백화점 등 화재취약시설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 면담, 화재취약요인 제거 등 안전컨설

팅을 한다. 화재취약계층의 안전강화와 거주자 중심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의 지속 보급 등 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석 연휴 전에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9월2일부터 11일까지 화재예방캠페인도 펼친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터미널, 역, 전통신장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추석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와 화재예방캠페인을 연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이슈 판결

현역입대 피하려고 일부러 몸무게

감량한 20대 '집행유예'

법원 "병역감면 위해 의도적 감량" 징역1년·집유2년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일부러 체중을 감량해 4급 판정을 받은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1)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10월 고등학교 3학년 때 몸무게 55.7kg·키177.4cm로 현역병 임명 대상이던 A씨는 현역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감량, 2017년 4월5일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몸무게 47.6kg·키179.3cm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 판정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1월30일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A씨는 몸무게 55.2kg·키178.8cm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BMI(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비만 측정법) 지수가 17 미만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식사를 하지 않는 등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지 않았다"며 "수능성

적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고등학교에서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몸무게를 측정했던 것이 체중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피고인의 신장과 체중 변화 추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메시지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성실하지 않은 설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마른 체형으로 BMI 지수가 4급 판정 대상에 가까운 등 체중 감량해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1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